

# 2005년은 FTA의 홍수, 농민단체의 역할은?



경북대학교  
교수  
김 충 실

2005년은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농업시련의 해가 될 듯...

2005년은 농민단체에게 참으로 특별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지난해 쌀 협상에 이어서 DDA세부협상과 수십 개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상을 한꺼번에 전개하는 정부의 농업개방정책에 농민단체들이 감당해야할 역할이 너무 벅찰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단체간의 갈등으로 내우(內憂)를 맞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금 '내우외환'의 시련에 봉착한 것 같다.

자유무역협정(FTA)하면 한·칠레FTA를 연상하게 된다. 2년 이상의 극심한 산고를 겪으면서 체결된 우리나라의 첫번째 FTA. 비록 원산지증명문제처리의 뒷마무리가 원만하지 못했지만 협상과정에 정

# FTA

부·농민단체·국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기에 비교적 원만한 협정내용과 국내대책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외교통상부가 담당국을, 농림부도 담당과를 각각 신설해야 할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킨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과정에는 견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는 온통 쌀 협상에만 관심을 집중했지 그 이상으로 위협적인 자유무역협정과정에는 거의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농업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하

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통상협정이 한번 잘못 타결되면 한국농업과 농가경제는 물론이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관하면 지난 한·칠레 협상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지불을 재현하게 되고 결국 참여정부의 농정불신과 농업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각계, 특히 정부당국과 농민단체 주역들은 원만한 협상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서로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보다 원활하게 가동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농업개방의 대세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농업통상협상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고 대응자세에 관한 문제의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 2005년에 범람하는 FTA 농업협상의 홍수, 그 실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었던 만큼 성과도 있었으므로 농업개방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뒤이어 타결된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자유무역협정은 의외로 가볍게 넘어갔다. 사실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부문이 불균형성장전략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인식한다면 농정에 획기적인 혁신이 없는 한 농업통상협정은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상은 싱가포르와 협정체결에 이어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같은 공동체,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 대상이다. 물론

이중에는 공동연구와 예비협상단계에 있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단계를 명목상으로 구분할 뿐이지 사실상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수십개국에 이르는 협상 상대국의 수도 많지만 세계전역에서 제조업의 무역 경쟁력이 있을 법한 국가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로 구성되는 EFTA가 자유무역협상 대상이 됨으로 지역적으로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DDA협상보다도 더욱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FTA에서는 전 세계의 국가 간에 한꺼번에 협정을 맺는 도하개 발아젠다(DDA)협상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다른 나라보다 특혜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므로 우리 농업처럼 경쟁력이 약한 상태에서 협정을 맺으면 약한 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FTA협정을 시도하기에는 아직 우리 내부 농정의 변화가 너무 미미하다. 더구나 DDA협상 하나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농업·농정현실에서 수많은 자유무역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농업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 되새겨야 할 자유무역협상의 선행 조건과 농민단체가 취할 전략적 진로

다시 한번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협상의 선행조건을 새겨 봐야 할 것 같다. 자유무역협정의 취지는 협정 당사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각자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강한 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당연히 도태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되고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협상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그 경제적 이익은 당장 쉽게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것과 시장 기능의 실패로 인한 소중한 비시장 가치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둘째, 농업과 같은 생명산업은 WTO가 인정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에 근거하여 협상내용의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실익이 있더라도 협상체결에 따른 피해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른바, 『선 대책 후 협상』을 강조한다. 이상 세 가지 조건은 농업통상협상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

본 조건이다.

물론 이 조건들을 협상당국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농업계의 입장에서 본 그 신뢰도는 높지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농업통상개방에 관심을 접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민단체가 앞장서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족시키는 해답을 가지고 정부의 협상내용을 견제·협력 하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참여나 투명성은 입으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이 같은 상황에서 농민단체가 취할 전략적 진로는 20개국 이상의 협상대상국 하나하나마다 대상선정의 적합성과 협상속도 및 협상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견제와 협조를 범국민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국익과 농업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가두투쟁 중심의 물리적 수단이 갖는 한계점을 이제는 지적수단으로 대폭 보완하는 것이 농민·농업을 위한 최선의 자구책이 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농민단체는 학자들마저 냉담해진 현실을 주어진 여건으로 반영하면서 전략적 진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

